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 25일까지... 방역조치재난피해 17만명 직권제외

법인사업자 58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안내문을 발송했다.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법인사업자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되며, 예정고지를 안내 받은 개인사업자 186만명과 중소기업 15만명은 고지서에 안내된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내면 된다.

올해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별도 고지를 하지 않는다. 예정고지를 받지 않았다면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14만명, 태풍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3만명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했다.

그 밖에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3개월 내 납부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조기환급금 지급 대상이 매출액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대상기업과 모범납세자 등은 법정지급기한보다 열흘 가량 빠른 10월 31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1일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업종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법인사업자 20만명에 제공한다.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받지 못했더라도 최근 신고사항을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의 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보 증금과 월 임대료를 입력하면 임대수입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휴택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매입 내역 조회 화면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형식을 통일해 납세자가 자료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 및 부당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스톡옵션 비과세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벤처투자시장에서 민간부문이 더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세제 인센티브 지원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실리콘밸리식 금융 등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벤처투자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벤처기업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열린 벤처기업 간담회에서 “민간의 유휴자금과 글로벌 벤처캐피탈 자금이 국내 벤처투자시장으로 유입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 벤처투자 생태계는 외적 성장에도 높은 정책금융 의존도와 낮은 민간지원 활용도 등 구조적 한계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전문 인력이 벤처투자시장에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모태펀드 신규 출자 및 회수 재원 활용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을 확충하되 벤처투자 창업, 성장, 회수 단계에서 민간 자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전했다.

벤처투자는 위험이 크고, 대가도 높은 위험투자다. 그간 정부는 일부 손실부담을 감안하고 벤처 육성에 나섰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세금지원으로 물러나고 민간 스스로가 위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이런 방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등과 세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사, 벤처캐피탈협회, 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